

## “지역 건설업체 임금체불 해소”

황영철 의원-건설노조 강원지부  
대금지급시스템 도입 관련 간담회  
황 의원 “협의 절차 긍정적 진행”



지급시스템 도입을 위해 현재 행정자치부가 검토 중인 사전협의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발주처가 건설업체에 바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시스템 도입이 추진된다.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공사 관련 체불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바른정당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사진) 국회의원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건설노동조합 강원건설기계지부 관계자 등과 도가 추진 중인 대금지급시스템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강원지부 측은 평창동계올림픽 공사대금체불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대금

현재 도는 강원지부의 요청으로 3억원을 투입해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기존 시스템과의 유사성을 검토하는 사전 협의 단계에서 서울시 대금지급시스템, 조달청의 ‘하도금지킴이’ 시스템 등과 중복성이 지적돼 난항을 겪고 있다.

황 의원은 “사전 협의 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이러한 검토 입장을 전달했으며, 한국지역정보개발원도 도와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사전 협의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서울=홍현표기자

## “건축법 현장관리인제 완화하라”

### 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촉구

강원도시군의회의회장협의회(회장 한의동 인제군의장·이하 협의회)가 건축법 현장관리인 제도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3일 태백시의회에서 제 184차 월례회를 갖고 건축법 시행에 따른 현장관리인 제도를 개선,완화해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협의회는 “지난 2월 개정된 건축법에서 현장관리인 규정이 소규모 건축공사에도 확대 적용됐는데 이는 소규모 공사의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며 “하지만 도내 건축허가 및 신고 건수를 비교할 때 현장관리인 배치가능 인력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기에 현장관리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된 건축법은 지역 인력수급과 공사비 상승에 따른 문제점 등 현실여건이 반영되지 않고 지역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는 또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의동 협의회장은 “건축법 현장관리인 제도완화 등은 도내 공동 현안으로 관련단체와 협력해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우열 woo96@kado.net

# “公共공사 낙찰률 10%p 이상 올려야”

유주현 건협회장, ‘적정공사비 확보돼야 품질 확보’ 강조

“일본은 2005년부터 공공공사 품질 확보를 위해 제도를 고친 후 평균 낙찰률이 92% 수준까지 높아졌습니다. 우리도 발주기관들이 낙찰률을 지금보다 최소 10%p 이상 높여 적정 공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사진)은 지난 22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3년 임기 동안 공공공사의 적정 공사비 확보에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유 회장은 “당초 예산에 적정 공사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낙찰률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실제 낙찰하한율은 고정돼 있어 그 부담을 고스란히 건설사가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건설업의 수익성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2005년 5.9%였던 건설업 매출영업이익률은 2010년에 5.0%로 떨어졌고 2015년에는 무려 0.6%까지 곤두박질했다. 1%에도 못 미치는 건설업 수익성은 같은 기간 제조업(5.1%)에 비해 9분

의 수준이다.

유 회장은 “건설업체의 수익성이 나빠지면 하도급·자재·장비업자 등도 줄줄이 어려워지고 건설일용직들의 소득감소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특히 중소 건설업체가 주로 수주하는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공사비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7년간 적격심사제 낙찰률이 80~87%대로 고정된 반면 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 확대, 표준품셈 현실화 등으로 원가율은 올랐다. 올해 100억~300억원 공사로 확대된 표준시장단가는 실제 시공단가의 88.8% 정도만 반영됐다.

유 회장은 “정부의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축소, 주택규제 강화 등으로 올해 건설수주가 대폭 줄고 건설경기가 향후 2~3년간 후퇴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며 “리스크 대처 능력이 열악한 영세기업의 경영악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태형기자 kth@

▶2면에 계속

1번서 계속 = “公共공사 낙찰률 10%p 이상 올려야”

일본 정부는 2005년 ‘공공공사 품질 확보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저임할가격 조사제도, 최저제한가격제도 등 이중 삼중의 적정 공사비 확보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후 낙찰률이 92% 수준으로 회복됐고 100%를 넘는 투찰 사례도 늘었다.

유 회장은 “현행 평균 79.1%인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률은 90% 수준으로, 적격심사제 공사는 89~97% 수준으로 각각 10%포인트씩 오히려 관련 규정을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또 최근 남해안 배타적경제수역(EEZ)의 마뎃보래 채취 문제와 관련, “부산·울산·경남 골재 수요량인 연간 1200만㎥만큼 추가로 허가해줘야 한다”며 “점수가 잠잠기적인 골재 대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올해 남해 EEZ 골재 채취량을 수요의 절반인 연간 650만㎥만 허가했다. 또 해수부는 내년 채취 허가분부터는 국책 사업용으로 용도를 제한키로 했다.

아울러 유 회장은 △종합-전문 건설사 간 업역 규제 폐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폐지 △300억원 미만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연구 배제 △노후 인프라, 생활밀착형 시설사업, 건설 메가 프로젝트 발굴 등 신시장 발굴 등 공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형기자

## 건축물·교량 등 31개시설 내진설계 기준 통일된다 안전처, 7월부터 시행

시설마다 다르게 적용되던 내진설계 기준이 7월부터 통일된다

국민안전처는 이성호 차관 주재로 지진·화산방재정책심의회를 열어 내진설계 기준 공통 적용사항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건축물과 교량 등 31개 종류 시설의 내진설계기준을 11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서로 다르게 적용해 온 탓에 일관성

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예를 들어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내진등급을 하나로 정해두고 있으나,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에서는 특-1-2 등급으로 세분화돼 있어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기도 했다.

이에 안전처는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내진설계기준 공통 적용사항을 마련했다. △기반 분류체계 △내진성능수준 분류체

계 △설계지진 분류체계 △내진등급 분류 체계 등 4가지다.

내진등급 분류체계는 지진 발생시 대형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을 ‘내진특등급’으로 정하고 사회적 영향의 정도에 따라 ‘내진 1등급’과 ‘내진 2등급’으로 차등 분류토록 했다.

기존 2단계였던 내진성능 수준을 4단계(△가능수행 △즉시복구 △장기복구·인

명보호 △붕괴방지로 세분화하고 자원은 등의 ‘지형주거별 분류에 의한 최장 주기 1000년’보다 긴 4800년 주기를 추가해 내진설계를 강화하도록 조치했다.

새 기준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안전처는 올해 7월 이전에 내진 보강을 한 시설에 대해서는 내진 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권성중기자 kwor88@